

社 說

경전철 '분당-우리학교' 연계돼야

우리학교 수원캠퍼스의 스쿨버스는 그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어서지 이미 오래고, 자가용 등고는 더이상 대안이 되지 못했다. 교통문제의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대중교통 수단의 유치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전철의 유치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우리학교에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사안이 있다.

지난 94년 결국 수원시 경전철 사업 노선이 확정되면서 우리학교는 수원의 동서간을 이어주는 일명 '동서선'에 포함되었다. 동서선은 전체 구간 총 47km 중 11.3km로 이 공사가 완공되면 학생 뿐 아니라 주변의 영통지구와 신갈지역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경량전철을 계획 중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 노선은 분당선과 연계하여 용인지역을 거치도록 기본안이 제안되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타노선과의 연계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당선과는 연계되지만 불과 4km 떨어진 수원의 동서선과 연결되는 것을 기본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인접지역과 대중교통수단인 전철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분당선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주축측에 매우 유리한 일이며 동시에 지역 거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 두 노선 모두에 연계되어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철은 한 번 만들면 쉽게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큰 규모의 사업인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발과 같은 존재이다. 수원선과 용인선은 지역적 유동인구나 지역정서, 경제적 수익,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지역이거주의로 방해받아서 안되는 일이다.

지역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전철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시설의 연계가 필요하다. 두 경전철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주체들은 전철을 연계하는 것이 곧 더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노동자 죽이기 '임금동결론'

지난 4일 전경련 최중현 회장의 '임금 5년 동결 긴급명령'의가 노동계 안팎에서 불고 있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반대와 더불어 대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중현회장은 현 경제위기를 진단하면서 '기업이 망하고 나면 노동법 개정이 의미가 없다'며 '긴급명령을 내려서라도 임금을 5년간 동결'하자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최회장의 제안이 올해 최대 쟁점중의 하나인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나왔다는데 주목한다.

우선 이 발언을 주창한 최회장자신은 물론 우리경제계가 노동조합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다시말해 노조의 1년 사업중 가장 중요한 임금협상이 오늘날 우리의 노동현실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5년간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또한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가입을 앞두고 지적했던 후진국형 노동법제를 개정하는 마당에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임금동결을 문제삼는 것은 어떤 의식에서인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노동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온갖 고통을 이겨내며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는 통치권자 개인이 아니라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의 몫인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위기를 내세워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결국 임금 때문에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즉 이번 발언의 진의는 노동계가 '계약'이라 일컬으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전경련이 현 경제위기를 문제삼아 '복수노조 허용'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은 물론 노동계에 대한 전면대응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현시기 노동법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경련에 대해 이번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중현 회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전진하는 경제 죽어나는 노동자

시론

김 경 희

(한국노동운동협의회·연구부장)

마침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내는데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내용인가?

경제논리 우선된 개정안

노사의 자율 교섭을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3급(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이 모두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복수노조의 대해서는 아직 삼급단체에만 인정하고 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 문제는 노사가 요청한 경우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간여, 조종, 선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에서 사용자의 요구대로 신규 하도급 노동자로 대체함을 허용하고 유니언숍의 경우 외부인력 채용대체를 허용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어 작은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은커녕 기존의 노조마저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교원의 단체 구성과 교섭협의권마저 99년 시행으로 미룬 것은 개혁이 아닌 자기 기만일 아닐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변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이른바 정리해고의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유연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요구대로 신설되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근로자 파견제를 이른 시일 안에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노동보호법에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규정 등을 새로 신설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경제논리가 목소리를 한껏 높여왔던 것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노동법 개정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 지난 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벌인 민주노총 시위

정부 부처간 의견대립후 사용자측 입장 편중돼 불가능한 노동자 지원대책으로 노동계 압박음 시도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경제발전 이루어야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는 노동조합의 저하나 노동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 노사관계를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정을 무채질하고 그것은 오히려 경제의 장기적인 호황상장과 기술혁신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발휘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경제발전과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과 권익의 보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 유지, 발전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이 열악하고 노동기본권이 지나치게 억압당할 때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이는 오히려 자본주의 제도를 뒤흔들게 될 수도 있다.

노동자의 창작성·자발성 제약

지난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그간 노동악법 철폐를 부르짖어왔던 노동자들은 악법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노개위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한 이후 개정안 마무리 작업이 정부가 주관하는 노사개혁추진 위원회로

옮겨졌을 때 친자본쪽으로 기울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노개위 역시 노개위 공익위원 안보다 훨씬 후퇴한 쪽으로 방향이 잡히더니 막판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더욱 자본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이러한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악법으로 지칭되었던 독소조항과 개별 근로관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지난달 10일 노동자대회 10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법 개악저지,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으며 3백 38개 산하 노조가 쟁의발생 결의를 하여 19일 노동부에 신고해 놓은 상태이다. 또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한국 중공업 등의 노조가 4일부터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6일 비상중앙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투쟁계획을 확정하여 13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전교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수업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점심 단식, 기본강기,

마하기 위해 기만적으로 노동자지원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재형저축 혜택 대상을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했다고 하나 재형저축은 사실상 폐지된 제도로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 자사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비파세하고 주택저축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확정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또한 무마용일 뿐이다.

기만적인 노동자 지원대책

재계에서는 오히려 계속 복수노조 반대를 외치며 노동법과 관련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관련 노동자에 대한 징계 및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에 대하여 노동법 개정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사법적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와 재계이다. 다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인 올바른 개정안을 내오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올바른 노동관계의 집단적 자치주의를 구현한다는 노동법 고수원리에 입각하여 올바른 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제논리에 노동자가 희생당해서는 안된다.

(PC통신원 기사첨착 쉽니다)



POSCO메시지 총강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
독일 남부 물음시 태생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용기

아인슈타인은 「포름」지에 게재된 '내가 믿는 것'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적 체험이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예술과 과학의 참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험심과 호기심은 인간을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게 하고 거기서 얻은 체험은 삶을 보람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금 펼쳐질 내일의 젊음을 실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번쯤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 모험을 계획하지 않겠는지요? 그것에 무모함이라는 결과가 있다해도 거기에는 적어도 경험이라는 점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일어나서 새로운 영역의 개척자와 모험자가 되어 무엇인가를 향해 한 발 떼어보십시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